

학자금대출제한으로 누가 피해를 보나?

조 기 조 | 경남대학교 기획처장 / e-Business학과 교수

들어가며

지난 9월 7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발표 이후 교과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칼을 대기 시작했다고 보지만 정확한 진단과 시술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인구통계를 보고도 대학의 설립을 인가한 교과부가 대학정원의 감축에 대한 책임이 있다.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자연 도태가 아닌 규제는 저항을 일으킬 뿐이다. 내버려두어도 조만간 문을 닫는 학교는 나오게 되어있다. 하지만 부실한 대학(법인)에 퇴로를 열어주면 자연스럽게 퇴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10월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에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발표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학구조조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상희 의원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등에서 참석하였다(당연하게도 교과부를 제외하고 이 제도에 찬성하는 집단은 참석하지 않았다). 발표자들은 모임의 제목에서 보듯이 교과부

의 방침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함을 들고 나섰다. 교과부로서는 할 말이 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교과부의 입장과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과부의 주장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을 수시 모집(9월 8일) 전에 발표한 이유는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교육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기제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학자금 상황이 원활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01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11년도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계획임을 공표한 바 있다. *2010.1.14. 보도자료('10-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 참조. 그러나 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수시모집 직전에 공개된 대학의 명단을 보고 거기에 해당된 대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교과부는 대출 제한 대학에 대한 정보가 수험생이 지원대학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학자금 조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시모집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은 대출한도 설정 결과와는 관계없이 전액 대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난 7월 30일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출한도 제한 대상 대학 선정기준 및 대출한도 설정방안에 대해서도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다. 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한 것이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출 상환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학자금 정책과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기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보면 교과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고 제도의 시행에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학자금 대출 제한은 신입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재학생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므로, 학자금 대출에 있어 재학생의 피해는 없으며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 발표로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이 올해의 지표값을 반영해 재평가 받아, 그

향상도를 인정 받아 대출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설령 리스트에 올라도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듬해에 탈피하면 대학의 체질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살생부의 위력

그러나 해당 대학의 처지는 다르다. 살생부에 오른 대학이 필사적인 노력으로 살아 남는다는 것은 부도난다고 소문난 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당연하게도 해당 대학들은 모두가 지방의 사립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방 대학이기에, 사립이기에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지방대학이기에, 사립이기에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이는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다. 주요지표인 충원율과 취업률, 재정건전성, 교수확보율 등을 보면 지방의 사립대학이 낮은 것은 구조적인 현상이다. 취업률의 경우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줄 세우기를 하는 현실에서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적절한 평가지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 실업을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과부는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고 선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에 정량적 지표 말고는 없는 것인가? 있다. 많다. 여하튼 공개된 이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지표에 분모가 되는 학생수를 줄이면 지표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원을 받게 된다. 대학과 전문대학,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 1만 명~5천명, 5천명 이하로 나누

어 비슷한 집단끼리 비교하여 선별지원을 하고 있다. 시비의 소지가 있는 지방과 비지방을 구분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사립과 비사립을 구분하지 않았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은 모두가 사립이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대학은 그 돈으로 지표값을 높여 이듬해에 또 지원을 받게 된다.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사립대학만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에 사립대학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또 이런 유사한 지표로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한다고 하니 지방의 사립은 안 그래도 불편한 심기를 폭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이해관계

교과부는 국립대학에 대한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교수들의 처우도 경쟁적인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국립대학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하여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국립대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낮은 등록금과 충분한 시설, 높은 교수 확보율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법인화로 등록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국립대학은 사립대와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신분문제를 포함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국립대 교직원들 중에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 사립대 총장협의회가 사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사립대학육성을 위한 건의)를 하였다. 외국에서는 사립대에 일정비율 이상의 정부지원을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예산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가 국립대와 형평성을 이루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립대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2/3 정도를 사립대학이 맡고 있기에 대학교육의 성패는 사립대의 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맺음말 - 위기에 처한 지방사립대

지방의 전문대학 중에는 충원이 어려워 외국인 학생들로 상당 부분을 채우는 경우가 있다. 수학생력이 갈수록 낮아져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대학은 수도권으로 편입 가는 학생들의 빈자리를 전문대 졸업생을 받아 채운다. 수학생력의 저하, 인구의 감소, 경기의 침체, 예산의 부족 등 온갖 불리한 여건에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대학과 교직원들은 심각한 위기를 의식하고 있다. 10년 후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만약 퇴출을 당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든 흡수되었지만 교직원들은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자금대출의 제한을 받은 대학에는 엄청난 충격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학생들에게 대학선택의 중요한 변수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는 것은 심정िया 이해가 되지만 견강부회한 감이 없지 않다. 구조조정의 유도는 역량강화사업의 평가만으로도 충분하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 스스로가 알아서 할 일이다. 구매자 시장에서는 구매자인 학생들이 상품인 대학을 결정한다. 인기 없는 상품은 퇴출될

수밖에 없고 퇴출되는 상품(대학)을 위해 퇴로를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등록금 이외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는 사학은 학생 수가 줄면 문을 닫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 퇴로가 없어 망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생존가능성이 있는 사학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세는 온 국민이 내고 있고 사립대학생도 과중한 부담 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자금 대출 제한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

필·자·소·개

조기조

경남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유타대학교의 연구교수를 거쳐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e-Business를 연구하고 강의하였다. 현재 경남대학교 e-Business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전자상거래'와 'For the Better Life' 등이 있다. 미국 유타주의 한글신문인 Korean Times of Utah에 객원 논설위원과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다(www.utahkorean.com).